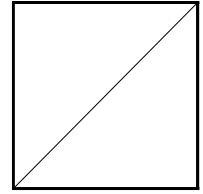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8 호
보 고 연 월 일	2020. 3. 18. (제 5 차)

보
고
사
항

코로나19에 따른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3. 18.

1. 보고주문

「코로나19에 따른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처리방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2020.1.15. 개정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사항 중 2020.3.31.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던 개정 내용을 금년도 상품개정 작업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력 운용의 한계로 기한 내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상당수 보험회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유예 종료일 전 개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험업법 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시일이 촉박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상상황 발생시 유예 기간 내에 상품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하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상품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보험회사가 개정 규정 사항의 상품 반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는 곤란한 바,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하여 2020.5.31.까지는 개정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을 표명하여 법규 미준수에 대한 행정제재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서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4. 참고사항

가. 적용 유예된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내용 : <붙임 1>

나. 비조치의견서 및 요청서 : <붙임 2>

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개정 관련 보험회사 애로사항 : <붙임 3>

라. 관계 법규 : <붙임 4>

코로나19에 따른 최근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

1. 검토배경

- ☐ 최근 개정 시행(20.1.15.)된 보험업감독규정 중 일부 사항은 부칙 제3조* 특례에 의거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금월 중 유예기간이 종료(20.3.31.)

*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 코로나19로 개정 감독규정 반영에 관한 상품개정 작업에 차질을 빚거나 인력 운용 한계로 기한 미준수를 우려하는 보험회사들이 발생

- 상품 전면개정은 작업의 복잡성, 다수 유관 부서 협업 등으로 장기간(8~10주) 소요되고 통상 매년 2~3월경 집중 진행되나, 재택근무 확대, 휴가자 증가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작업 진행에 애로*

* 상당수 보험회사의 상품개정 진척률은 대략 50% 수준으로 파악

< 보험상품 개정 절차(약8~10주 소요) >

1. 상품개정 절차

- ① 개정안 및 기초서류작성 ② 요율산출 및 검증 ③ 수익성 분석
④ 고객 안내자료 작성 ⑤ 가입자 교육자료 작성

2. 유관 부서 협의

- ① 법률검토 ② 민원.보험사기 가능성 검토 ③ 수당정책 재수립 ④ 시스템 반영
⑤ 선임계리사 검증 ⑥ 사내위원회 심의 ⑦ 요율확인기관 검증(외부)

-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험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위원회에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접수(20.3.10.)

2. 개정 감독규정의 상품 반영 기한 연장 불허시 문제점

- 개정 규정은 사업비 체계 개선 및 공시 등 상품 전반에 관한 사안으로 당초 적용기한 강행시 불완전한 상품 개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 코로나19 장기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직장폐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품개정 업무의 부분 내지 전면 중단 가능성 존재
- 관련 규정 미준수시 행정제재(과징금, 과태료) 대상으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적 상황에 따른 보험회사의 관계 법령 위반 소지

< 주요 유예 규정 및 위반시 제재사항 >

개정 내용	관련 감독규정	위반시 제제
표준해약공제액 초과 신계약비 부가시 사업비 공시기준강화	제7-45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	과태료 (1억 이하)
	제7-64조 제3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해당 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50%이하)
갱신형상품 계약체결비용 축소	제7-51조 제3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보장성 상품 추가납입한도 축소	제7-55조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축소	제7-69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7-70조 (제3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 ▶ **코로나19에 따른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감안, 상품개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불완전 상품개발을 방지하고, 행정제재 노출 우려를 해소할 필요**

3. 처리 방안

- 규정 개정시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에 따라 발생한 문제임을 감안, 관련 운영규칙 제4조2항에 근거하여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가능
 - 상품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에 2020.5.31.까지는 개정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비조치하겠다는 의견을 표명
 - ※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정에 소요되는 실무기간(약2달) 및 조치의 신속성 감안시 적용하기는 곤란
 - 금번 비조치의견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로 관련 운영규칙*에 의거 비조치 회신 前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 필요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

<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요 >

1. 제도 근거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2. 정의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3. 요청대상(규칙 제4조)
 - ①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 ②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③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처리 절차(규칙 제6조) :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나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회신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4. 향후 계획

- 보험협회의 요청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을 제공할 예정

붙임 1**3.31일까지 적용 유예된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내용**

- ① **(과다 사업비 부과상품 공시: § 7-45조, § 7-64조)** 사업비 과다 부가방지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가 과다 부가되는 보험상품이 증가*

*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 : (생보) 약 31% (손보) 약 17%

⇒ (개선)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가 책정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상품의 사업비 공시를 의무화

* 해약공제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보다 보험료는 3~4% 인상

- ② **(갱신계약 사업비 인하: § 7-51조)**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재가입시 사업비율이 최초 가입시와 동일하여 갱신 보험료의 사업비가 과다* 책정

*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

⇒ (개선) 자동갱신·재가입 시점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최초 계약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설정하도록 보험상품 신고기준* 개선

* 갱신시 사업비율이 계약시 사업비율의 70% 초과하는 상품은 금감원 신고대상에 포함

- ③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 7-55조)** 보장성보험은 가입이후에 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저축성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일부 설계사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유인하여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 증가

* 추가납입 보험료는 위험보장이 없는 적립금만 증액시키는 저축성보험료

⇒ (개선)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납입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축소(저축성보험 추가납입 한도는 현행 유지)

- ④ **(보장성보험 사업비 축소: § 7-69조, § 7-70조)** 보장성보험의 중도·만기 환급금 관련 보험료는 저축성의 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의 높은 사업비(계약체결비용)가 부가되어 저축성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책정

⇒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중도·만기 환급금 재원)에 대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

* 해약공제액(보험계약 해지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사업비)의 상한

붙임 2 비조치의견서 및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담당자 (직위, 성명)	선임조사역 나예린	연락처	02-3145-7468
	관련부서 1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담당자 (직위, 성명)	선임검사역 한태희	연락처	02-3145-7773
	관련부서 2	손해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담당자 (직위, 성명)	선임검사역 김지훈	연락처	02-3145-7512
요청대상 행위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개정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 상품에 반영하는 개정 작업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감독규정 부칙 제3조(특례)에 따라 '20.3.31.까지 적용 유예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조치를 요청					
판단	<input type="checkbox"/> 감독규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외부적 상황을 감안하여 ①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특례) 의거 적용 유예된 감독규정'에 한하여 ② 유예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20.5.31.기간 중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 <input type="checkbox"/> 다만, 예정이율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면서도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상기 개정 감독규정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비조치의견서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단이유	<input type="checkbox"/>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div style="text-align: right;"> 2020년 3월 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div>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신청인	법인	상호	(사)생명보험협회		대표자	신용길	사업자등록번호	201-82-30608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6층(충무로3가)					
		연락처	소속부서	리스크관리지원부	담당자	김우열 과장		
			전화번호	02-2262-6663	휴대폰	010-2990-7514		
		팩스번호	02-2262-6576	이메일	merkartz@klia.or.kr			
질의요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20년 5월 31일 또는 6월 30일까지 검사·제재를 통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가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비조치의견서인 경우 구체적개별적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재택근무 확산, 주4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 금지, 정보시스템 부서 분산근무 실시, 대면접촉 회의 자제, 임산부 및 저연령 자녀 부모인 직원의 특별휴가 실시 등으로 인해 최대 30%*의 업무처리능력이 저하되어 연중 업무가 집중되는 보험상품 전면개정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함 * 전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시 업무량 대비 <input type="checkbox"/> 또한 보험회사내 확진자 발생시 방역을 위한 사업장 폐쇄 및 상품개발부서원의 자가격리 등 추가적인 인력부족이 예상됨 </div>						
관련 법령의 조문 또는 공문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에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아래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주)} 적용 <input type="checkbox"/>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input type="checkbox"/>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 <input type="checkbox"/>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input type="checkbox"/>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정기준 일원화 <input type="checkbox"/>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주)}제 7-45조, 제 7-46조, 제 7-51조 제3호, 제 7-55조, 제 7-64조 제3호, 제 7-69조, 제 7-70조, 별표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 사항 </div>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통상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상품개정을 위해 1~3월 중 주 52시간 한도내에서 쉼부서원의 집중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을 따르면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3월까지 반영하기에는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생명보험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생명보험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요청드립니다 </div>						
회신문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희망 사유()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희망 기간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신청인	법인	상호	손해보험협회	대표자	김용덕	사업자 등록번호	102-82-04254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연락처	소속부서	장기보험부	담당자	박기준 부장		
			전화번호	02-3702-8531	휴대폰	010-9047-3813		
		팩스번호	02-720-9730	이메일	pkijun@knia.or.kr			
질의요지		일부사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20.1.15일 개정 고시된 보험업감독 규정의 적용을 곤란한 사정이 있어, 이를 '20.5.31일까지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재제 등 금융당국의 비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구체적개별적 행위)		<p> '20.1.15일 개정 고시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20.4.1일까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의 개정을 진행하여야 하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사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직원의 재택근무, 분산배치, 휴가사용, 시차 출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사의 경우 이로 인해 인력운용 등이 어려워 상품 개정을 '20.4.1일자로 완료하는 데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며, 현재 애로가 없는 회사라도 추후에 회사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직장폐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보험상품 개정 작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p> <p> *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호, '20.1.15)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별표15 </p> <p>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는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부응하고자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20.1.15일 개정 고시된 보험업감독규정을 '20.4.1일까지 부득이하게 적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배려가 필요함. </p>						
관련 법령의 조문 또는 공문등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호, '20.1.15)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 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별표15 및 부칙 제3조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		<p>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동 감독규정 개정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 </p> <p> 동 감독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가 무리하게 상품 개정, 비교공시 등의 제반업무를 진행하기 보다는 회사별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적용 유예('20.5.31일까지 동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재제 등을 비조치)를 두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p>						
회신문 비공개 희망하는 경우		■비공개 희망 사유() ■비공개 희망 기간 ()						

① 전반적인 가용 인력 감소 및 운용 한계

- 감염취약자(임산부) 특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자 증가
- 대다수 보험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확대*
* 일부 보험사는 전 직원의 50%가 재택근무 혹은 휴가 사용
- 상품 전면 개정 기간이지만 야근 및 특근 제한
- 유증상자 등 대상 일정기간 자가 격리

② 상품 부서 내 혹은 외부기관과의 협업 진행 제한

- 접촉 최소화를 위한 시차출퇴근, 대체근무지 및 자택 분산 배치
- 상품 개발은 다수 유관 부서(법무, 인수, IT, 마케팅 등)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나 격리 및 유증상자 발생시 일정 조정 불가피
- 외부 회의가 제한되고 관계기관에서의 격리자 발생 상황시 요율 검증, 전산 반영, 약관 인쇄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 진행에 차질

③ 상품 개정 작업의 체감 진척률 저조

- 상당수* 보험회사의 작업 진척률이 50%이하 수준으로 파악('20.3.3.기준)
* 생보 14개사 및 손보 10개사
-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상상황 감안시 작업 진척률 증대에 한계

④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비교공시 작업 지연

- 상품 개정 지연시 협회의 비교공시 작업에도 차질
- 공시정보 제공 시점 상이로 인한 소비자의 비교공시 정보 오인 우려, 공시 조항에 대한 기한 유예는 동일 시점 적용 필요

【 보험업법 】

제124조(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 (생략)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 (생략)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0의2. (생략)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15. (생략)

②~⑥ (생략)

【 보험업감독규정 】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상품설명서, 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6. (생략)

②~⑪ (생략)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②~⑥ (생략)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최초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보험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6. (생략)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 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약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5. (생략)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3조(특례) 보험회사는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 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 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요청절차) ① (생략)

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처리절차)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 요청 대상이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이거나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④~⑧ (생략)

⑨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회신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⑪ (생략)

제6조의2(조건부 답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내용 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60	02-3145-7460